

국민연금 가입기간 60→65세 조정?

국민연금 개선안 17일 공청회 소득대체율 유지위해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노후소득보장·재정안정화 목적 연장안도 복지부 "정부안 확정 아냐" 선 그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기금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9년부터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계산은 출산율을 비롯한 인구 변수와 임금·물가상승률 등을 검토해 재정상태에 대한 장기전망을 예측하는 작업이다. 진단에 따라 제도 수정이 필요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및 기금운용 정책을 개선한다.

재정계산에 따라 올해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83만6547명과 수급자 458만3617명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 예상한 2060년보다 3년 이상 앞당겨질 거란 전망을 내놓고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가입기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사업장가입자 기준)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20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 소득액 대비 연금 수령액을 뜻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초기 70%

에서 1998년 60%에 이어 2007년 이후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기로 한 뒤 11년째 변동이 없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참여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2.9%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기존 정부안 15.9%)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국회가 반대하면서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만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과 같은 연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제도발전위원회가 제도 수정이 적었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볼 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금보다 3~4%p 높은 12~13% 인상안 전망이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올해와 같은 45%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인상폭은 늘어날 수 있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퇴직 이후 연

금 수령때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인데, 수급연령은 도입 당시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살씩 높아져 2033년이면 65세가 된다. 가입기간을 60세 미만에서 수급시점인 65세로 늦추는 건 소득공백을 메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정 안정까지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이처럼 쏟아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3개 위원회 논의를 기초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은 최종 계획은 10월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는 국회 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내년부터 추진된다. /뉴스

전북대, 전문가 양성 나선다

과기정통부 '청년 TLO 육성사업' 선정... 34억 지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철로)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재진흥원이 추진하는 '청년 TLO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3년간 약 34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기업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 실험실 보유 기술의 민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맞춤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학 실험실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들을 민간 기업에 이전에 기술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미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를 선발·채용하여 '청년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대학기술 이전조직)'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 선정에 따라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60여 명을 매년 선발, 이들을 '청년 TLO'로 채용해 기본 역량교육에서부터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예정이다. 이들은 실험실에 실제 근무하면서 연구 지원과 실험실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오는 8월 22일까지 '청년 TLO'를 모집·채용해 2주 간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취·창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시에 양성, 배출하여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이철로 전북대 산학협력단장은 "채용된 청년 TLO 연구원은 이번사업으로 대학 연구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 보유기술 이전 사업화와 창업 촉진 및 취업에 연계시키는 한편,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성폭력 사건접수 안해도 전문가 컨설팅 지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 자체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사건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전문가 컨설팅(자문)'을 확대 실시한다. 지난 10일 여가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성평등 의식을 갖춘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등 44명의 전문가로 컨설팅위원단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기관내 자체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들 기관에도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13일부터 9월12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 유형과 경중을 고려해 해당 사건에 적합한 2~3명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 방향 제언 ▲폭력 예방교육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 규정, 지침 점검 등이다. /뉴스



'뺨이 입을 벌린 듯'... 참배암차즈기 최근 어느 수목원에 참배암차즈기가 노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꽃잎의 벌어진 모습이 마치 뺨이 입을 벌린 듯해 '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참배암차즈기는 국내에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이다. 8월께 노란 꽃을 피운다.

내년 고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명까지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전주시 지역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전년 미달인원(437명)을 반영해 30명에서 27명으로 감소한 28명으로 배정했고, 군산·익산지역은 평준화고 진학비율을 고려해 30명에서 1명 감소한 29명으로 배정했다. 3시 지역(전주·군산·익산) 특성화

고와 비평준화 일반고는 25명에서 3명이 감소한 22명을 배정했고, 3시의 지역은 24명에서 2명 감소한 22명을 배정했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감소(2018년 1만1,175명→2019년 1만7,820명, 355명 감소)하기는 하지만 2018학년도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으므로 기존 고등학교 학급편성 지침을 유지해 학급

당 학생수를 낮추는 교육여건 개선과 미평준화 학급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학급감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교 입학 예정자는 2019년 1만7,820명에서 2025년 1만5,523명으로 12.89%(2,297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낮춰 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폭염에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제공해야"

선풍기도 켜지 못하고 자다 고열 의사 "24시간 간병 필요하다"

폭염에 중증장애인이 혼자 생활하면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상임위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폭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월, 화, 금, 토요일 4일간 24시간 근무하고 수, 목, 일요일은 퇴근해 피해자는 3일 밤을 혼자 지내왔다.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

을 받기 위해 한달 720시간이 필요하지만 국가와 서울시 지원의 서비스 총 시간은 508시간으로 122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지난 2일 밤, 문을 닫고 벽에 설치된 선풍기도 켜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고열과 기침 증상을 느껴 다음날 병원을 진료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38.6도로 담당의사는 피해자를 큰 병원에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안정될때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민센터를 방문, 서비스 시간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장애가 아닌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구청 역시 복지부와 서울시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폭염 속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